

2019년 제1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 결과 보고

□ 포럼 개요

○ (주제) 국가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

- 사회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국가기록원)
- 발표 : 이영남 교수(한신대학교), 박지태 연구관(국가기록원)

발표 제목	발표자
기록의 정치성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이영남 교수
'기록공동체의 형성'과 '기록관리의 방향성 찾기'	박지태 연구관

- 토론 : 박종연 위원장(한국기록전문가협회), 남경호 연구사(국가보훈처), 나창호 연구관(국가기록원)

○ (일시/장소) '19. 4. 25.(목) 14:00~17:00 / 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참석) 총 73명

- (내부) 국가기록원장, 부서장, 관련 담당자 및 관심있는 직원 28명
- (외부) 토론자, 기록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 등 45명

※ 공공기관(13명), 교육청(12명), 중앙행정(8명), 지방행정(4명), 군기관(3명), 대학교(3명), 대학원생(1명), 기록관리협회(1명)

□ 추진 성과

- 민·관·학계 연계의 전문가 발표·토론 중심의 '열린 논의의 장' 마련
- 기록관리 유관 학·협회, 대학교 등 포럼 관련 사항 공유 대상 확대
- 오픈 토론방('기록원 정책포럼') 운영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 참여 유도
- 포럼 내용 공유를 위한 발표·토론 현장 영상 제작(홍보팀 협조)

□ 주요 논의 내용

- 국가기록관리의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록혁신 및 방향성 검토
-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기록관리의 정치적 중립성, 기록공동체의 개념, 공동체의 위기 및 소통 방식, 아카이브 거버넌스 등

□ 향후 계획

- 제4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 : '19. 5. 22.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주광 연구관(전자기록관리과))

① 기록의 정치성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박종연 위원장) ① 기록관리 종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조직에 있는 동시에 개별인간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따라서 기록관리 종사자들이 기록공동체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록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의 토양,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② 기록관리는 법과 제도 하에 사회적 관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관념이 기록관리를 기록행정으로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기록행정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음. 기록행정 붕괴의 의미는 제도의 전복이 아닌 현행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 나아가 그 속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종사자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임.

③ 기록의 소비자에 대한 부분으로, 서태지의 아카이브처럼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의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아카이브라 단어는 더 이상 공공 영역의 전유물이 아님. 소비자들은 공공 영역의 아카이브를 즉각적인 소비재로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기억을 자신들의 규범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록관리가 이들을 제도권 밖의 다른 것으로 보고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임.

=> (이영남 교수) 예로 든 서태지의 아카이브를 소비자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자로 볼 수 있음. 생산자로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라면 피동적이 될 것 같음.

=> (박지태 연구관) 기록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들도 필요에 따라 플랫폼을 자유롭게 만드는 유연한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봄. 개별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정부 기능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기록관리의 역할이나 기능도 맞춰가야 할 것임.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기록관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19년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바도 공유해야 할 것임. 그런 점에서 단순히 소비자로서 고객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다각도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임.

④ 기록학에서도 경영학적 마인드는 필요함. 기록관리는 기록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돕는 역할로, 소비자의 요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임. 즉, 기록생산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고 관리 단계를 효율화 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록관, 아카이브는 경영되어야 함.

=> (이영남 교수) 조직 운영 시에 경영학적 마인드는 필요지만, 너무 강조된 감이 있음. 경영학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학문으로 과연 공공기관이 그래야 되는가 의문이고, 오히려 정치학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카이브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이고, 아카이브의 수장 혹은 구성원들도 정치학 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⑤ '국가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의 수립 또는 변화를 위해서 '국가기록원이 지향하는 방향성(=가치=사명)'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우선 고민해야 할 것임. 기록원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기록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접점을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 접점을 위해 기록원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기록공동체에게 우선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남경호 연구사) ① 국가기록관리 제도, 시스템, 인력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던 반면, 1인 기록관의 문제점, 정보공개와 기록이용의 혼란,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공공기록의 정치적 악용 사례 등 미해결된 여러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음. 2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면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② 지난 20년간이 기록학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학 이론에 기반한 실무 이외에 유관 학문과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필요함.

③ 기록공동체의 정체성은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기록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서 발휘되어야 하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영남 교수) 공공기관 연구사들의 고뇌가 클 것으로 짐작되지만 연구사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조직화 하여 기록공동체에 필요한 공적인 목소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개인적으로 기록관리 행정은 여전히 유효한 담론으로 생각되는데 공공 영역의 기록관리 부분에 대한 변화가 어디까지이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 영역이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지?

=> (이영남 교수) 국가기록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기관으로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기 바라며, 공공기관의 기록관이 총무 계열이 아닌 감사, 기획, 문화 부서 등에 소속되어 기대역할을 찾는 것으로 조직을 바꾸면 좋겠음. 또한 국가기록원 내부 부서에서도 서비스부가 선임부서가 되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갔으면 함. PR(public rel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행정의 영역은 줄어들고 시민의 영역이 늘어날 것이므로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동시에 인권의 문제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② '기록공동체의 형성'과 '기록관리의 방향성 찾기'

○ (박종연 위원장) ① 국가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과 기록공동체의 역할은 기록관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기록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록관리가 국민(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임. 기록관리제도의 개편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의 개선이 기록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박지태 연구관) ①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기록관리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던 참여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전자정부, 지식 기반의 상호간 소통,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참여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해서 '04년의 혁신, '07년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 졌음. '19년도에는 현재 시대를 바라보는 키워드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 세부 과제들이 설정되어 질 수 있을 것임. 현단계는 이를 모색하는 시기로 가급적 많은 분들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가고자 함.

② 국가기록관리 중장기발전전략도 선협적으로 국가기록관리(또는 공공 기록관리)가 무엇이며, 기록관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기록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기록공동체의 역할 또한 재논의 되어져야 할 것임.

○ (남경호 연구사) ① 발표자의 기록공동체의 위기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반면, 그 위기 속에서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봄.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서 벗어나 해결방안이 나오게 된 기록관리 경험을 분석하고, 이런 경험을 현장, 학계, 산업계가 공유하여 새로운 정책, 이론, 실무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기록관리 공동체라는 기준으로 개개의 경험을 분석한다면 공동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박지태 연구관) 공동체의 위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고, 다만 명시적인 공동체가 실존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위기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임. 현재 기록관리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음.

② 향후 국가기록관리의 방향으로 현장의 경험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99년 법 제정과 '07년도의 전면개정은 당시 소수 인력이 모여 기록관리 제도를 정비하였다면, 이번에는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관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함.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안으로 기관 담당자의 응답률을 높이는 과정을 밟는다면 기록공동체의 느슨한 관계는 단단해질 것이며,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의 지향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나창호 연구관) ① 기록공동체는 '05년 전문요원들이 기관에 배치되는 시점에 '공동체'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진 공동체는 있었다고 봄. 다만, 공동체가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이후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구조 조정에 실패하고, 전문요원의 증가로 기록관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심화되었다고 봄. 특히 '08년 이후 정치적 사건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록공동체의 위기가 왔다고 봄.

② 기록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기록의 역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음. 중장기 발전, 국가기록관리의 변혁과 혁신의 핵심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한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될 확률이 높을 것임.

=> (이영남 교수) 아카이브의 중립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한 행동에 지난 10년간 문제가 있었다고 봄.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면서 아카이브의 가치, 역할을 지켜야 되므로 그 지점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임.

=> (박지태 연구관) 개인적으로 기록관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기계적인 중립성은 그것이 곧 강제되어질 것이고, 강제를 통해서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더 자유로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③ 20년 전에 사무관리에 대체하는 행정업무 차원의 새로운 기록관리 영역이 시작됐지만, 그 당시 기록관리라는 큰 이상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99년 당시 기록관리 법과 제도를 만들고 행정적 관점에서 기록행정이 시작되었고 20년간 시행해 왔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새로운 혁신의 작업을 시도해야 할 것임. 새로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발전전략은

지금까지 기록권을 가지고 안락함을 제공받았던 구태의 기록관리라는 집을 허무는 용기가 필요할 것임.

④ 지난 20년간 공공 영역에서 기록관리의 외형적 성장은 거둔 반면, 아직 내적·질적 성장을 거두지는 못하였음. '17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음. 민간 기록관리 전문가가 국가기록관리의 양대 수장(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이 되었고,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는 일련의 변화 등은 기록관리 틀을 제대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기록공동체와 국가기록원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이라고 봄.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① 무언가를 공유하면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전문직제도는 공동체의 개념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봄. 다만, 공동체를 운명공동체의 동의어로 생각하지 말고 자격, 업무 목적 등을 공유하는 용어로 조금 다운해서 사용하면 좋을 듯함. 그런 의미에서 기록공동체는 '99년 이후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바운더리의 문제는 분명하게 확립하고 나누려고 할수록 전문가의 자생력 혹은 사회적인 의미가 약화될 것이므로, 느슨하면서도 항상 실존하는 공동체로 너무 끈끈하지 않게 이해와 관심을 공유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② 20년 전에 설정했던 기록관리 이상이 너무 컸고, 20년 해서 안 되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인적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며 전문직 공동체의 역사를 50~7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사서직과 마찬가지로 기록관리직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될 것으로 봄. 당초 세운 목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을 수 있으며, 오히려 당시에 세웠던 목표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부족했는지를 진단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오랫동안 안 된 것이니까 버려야 하고, 기록관리 이상이 너무 커서 잘못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붙임 2

2019년 제1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모습



